

주먹구구식 개발은 이젠 제주도 개발 특별법제정을 반대한다

70년대 이후 불어닥친 개발붐은 20여년동안 전국토 개발화로 달려 왔다.

물론 이는 6.25한국전쟁으로 폐허화된 국토를 재건한다는 명목과 개발 성장론이 맞물려 이어온 결과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개발이 곧 발전이라는 인식이 빚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개발은 발전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믿는 정부당국의 인식이 개발 지상주의를 불러왔고, 이런 정부당국의 성원과 묵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개발지상주의에 참여함으로써, 오늘날 전국토를 전혀 새로운 양상으로 조성해 놓고있는 것이다.

물론, 개발은 이익적인 측면과 발전적인 측면을 가지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그 후의 문제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행하는 개발은 부정적인 측면을 표출한다.

첫째는 생태계의 변화와 환경의 악화다 그리고 둘째는 빈부의 격차폭을 넓히고 셋째는 총체적인 경제의 손실을 수반한다.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정부는 개발 우선론만을 앞세워 전국토를 폐허화 내지 초도화 시키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한심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예와 증거는 너무나 많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곳이 제주도다.

오늘의 제주도를 관광지 개발의 성공적(?) 모델 케이스로 보는 시각도 있는 모양이나(이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생태학적 내지 환경적 측면에서 평가할 때는 실패도 대실패이며, 특히 제주도 주민의 입장에서 볼때는 개발과 어설픈 관광지 조성으로 고향(생존과 생활의 기반)을 수탈당한 꼴이 되었다.

심지어는 재벌들의 땅투기의 현장으로 변해 초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남한) 면적의 1.8%를 차지하는 제주도의 땅이 수십년 사이에 엄청나게 전매되어 외지인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재벌들이 제주도의 광활한 초지를 거의 독식하고 있다.)

민주당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 땅 총5억6천여만평중 13.6%가 외지인 소유였고, 이를 다시 전체 사유지 4억3천8백만평을 기준으로 보면 약 25%가 외지인 소유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제주에서 발간되는 모 신문에 의하면 「성산포」 「강정」 「남원」 등 제2차 종합개발계획 주요 개발지구의 60~80%가 외지인 소유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외에도 현지인 명의로 구입한 외지인의 땅도 상당수 있어, 실제 제주도 땅 30% 이상이 외지인의 소유라는 것이 일반적인 추측이다.

일반의 인식으로는 도저히 사유지가 될 수 없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명소인 「성산 일출봉」의 분화구와 「산굼부리」의 분화구마저 서울의 모씨의 소유로 알려져 있는 형편이다.

이런 제주도의 개발과 외지인의 사유물화에 대하여 제주도민의 감정은 폭발직전인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필자가 만난 모씨 (제주도에서 발간하는 모신문사의 사진기자)는 “이렇게 제주도를 투기의 대상으로 정부와 가진자가 농락하면, 큰 코를 다칠 것”이라고 경고하며, 제주도민의 저항의식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경고했다.

특히, 92년부터 오는 2001년까지 시행될 제주도의 <하와이형 개발>에 대하여는 제주도민 70%가 적

멈춰야 한다!

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제주도 개발 특별법>은 백지화되거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의 증거로 지난 9월 19일 그동안 매립문제로 시끄러웠던 탐동현장에서 제주도민 3천여명이 모여 제 1차 범도민 쉼기대회를 개최하였던 예를 들 수 있다.

이는 그동안 개발위주의 정부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구체적인 항거로, 이런 저항의 불씨는 의외로 커질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제주도 개발 특별법>에서 보여주는 독소적 조항은 외지 재벌의 자본과 힘에 의한 개발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70년대 초부터 외지인의 투기 대상으로 전락해온 제주도를 합법적인 <특별법>을 만들어 외지인의 손에 제주도를 그대로 넘겨주려는데 대하여 제주도민의 울분이 분출한 것이다.

그동안, 골프장이다 호텔이다, 콘도다 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제주도에 이익을 주는 것 같이 보이는 외지인의 투기에 대하여 제주도민들은 순종과 인내로 견디어 왔지만, 그로 인해 파생된 생태계 파괴와 환경악화로 인한 삶의 질의 저하를 발견한 현재의 상황에서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문제로 도출된 것이다.

그 대표적인 문제가 식수문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성에 비해, 수량이 비교적 많고 그 질이 우수했다. 그래서 외지의 모 재벌은 이런 사실에 이재의 눈을 떠, <제주생수>라는 라벨로 제주의 물을 퍼담아 육지로 공급해 팔기 시작했다.

심지어는 그 재벌이 소유하고 있는 항공사의 국



특히, <제주도 개발 특별법>에서 보여주는 독소적 조항은 외지 재벌의 자본과 힘에 의한 개발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70년대 초부터 외지인의 투기 대상으로 전락해온 제주도를 합법적인 <특별법>을 만들어 외지인의 손에 제주도를 그대로 넘겨주려는데 대하여 제주도민의 울분이 분출한 것이다.

제선 항공기내에서도 제주도의 물은 그 항공사의 트레이드 마크로 외국인의 입맛을 충족시켰다.

이렇게 제주도의 물은 육지의 오염된 물을 대치하는 외지인의 식수로 변해, 제주도의 물은 마구잡이로 퍼 올려져 왔다.

그 결과 성산포 일대를 중심으로한 제주도 동부 지역의 지하수에서만 나타나던 “잔물현상”이 최근 들어 제주도 서부지역을 비롯해 제주도 전역으로 변지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의 식수인 지하수는 전체 강우량의 약 45%에 해당되는 강수가 땅속으로 흘러들어 형성된 것이다. 이렇게 지하로 흘러든 물이 바닷물과 섞이지 않는 이유는 바닷물이 지하수보다 비중이 높아 지하수를 밀어 올림으로써 지하수가 해수위에 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지하수를 지하로 유입되는 양보다 많이 퍼 올리면, 그만큼 빈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그 공간을 바닷물이 들어와 채워지게 됨으로써 지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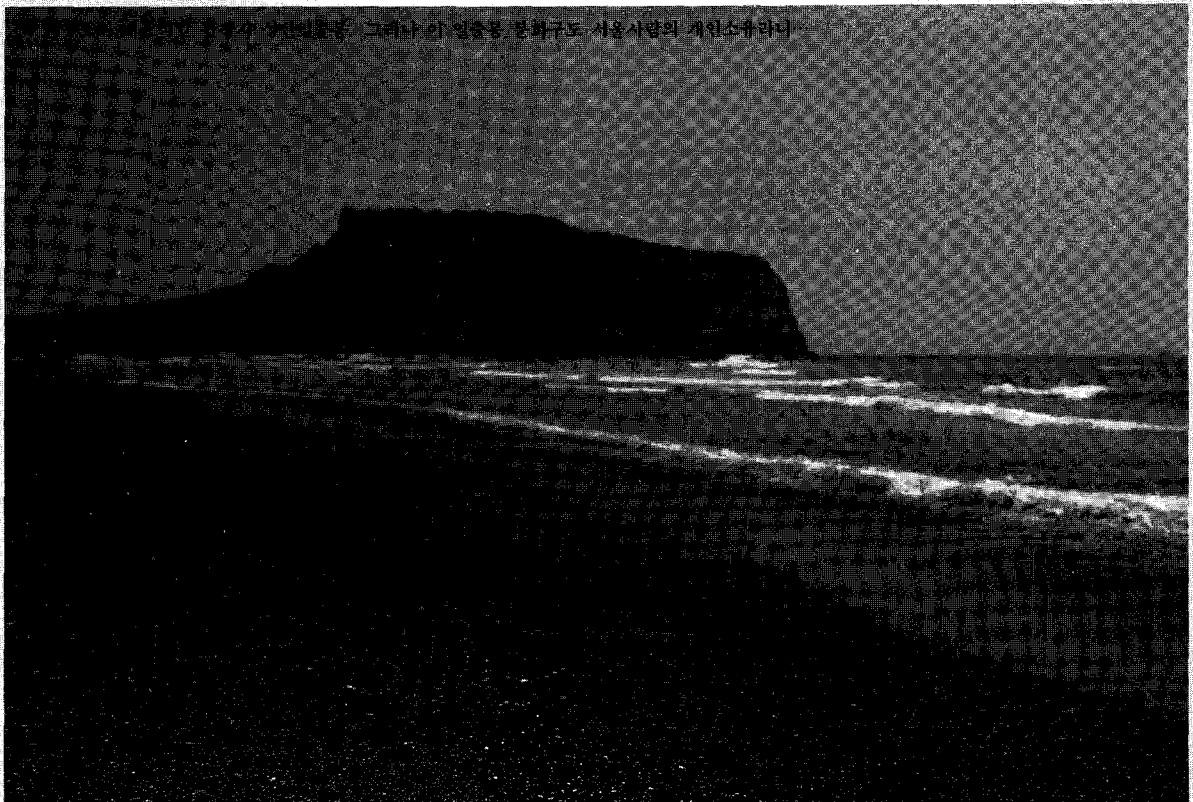
의 “잔물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말하자면 모 재벌의 이익과 육지인의 제주생수의 기호가 제주도민의 생명수(제주도의 지하수 의존도는 55.5%로 육지보다 훨씬 높다)를 빼앗은 결과가 된 것이다.

여기에 제2차 제주도 종합개발이 시작되면 해발 200~300m의 중산간지대에 골프장과 호텔 그리고 콘도와 각종 대규모위락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라, 제주도의 지하수 “잔물현상”은 더욱 확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골프장 농약으로 지하수가 위협 받고 있는 현실에서 개발로, 향후 20개의 골프장이 더 들어서면, 제주도의 지하수는 농약과 해수로 범벅이되는 최악의 상황을 만날지도 모른다. 제주도의 중산간지대의 토양은 화산회토로 매우 푸석푸석해 물이 지하수로 유입되기 좋으므로, 제주도의 강우 분포상 지하수 충전의 유일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이런 지역적 특성이 오히려 오염을 더욱



개발은 아무리 용의 주도하게 실시해도,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악화시키게 마련이다. 더구나 주먹구구식이거나, 누구(재벌 등의 이익집단)를 보아주기 위한 개발은 나라마저 망침을 유의해야 한다. 이제, 그만 개발의 삼질을 돌아보아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생태계의 마지막 마지노선이며 환경의 바로미터인 제주도의 개발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을 경고한다.

가속화시킬 수 있는데, 투수속도가 빨라 오염물질이 쉽게 지하수로 유입되는 것이다.

따라서 골프장에서 배출되는 유기합성 농약과 호텔과 콘도 등 각종 시설물에서 나오는 폐·하수가 그대로 지하로 흘러 들어가면 심각한 지하수 오염을 불러온다.

그리고 중산간지대의 토양은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필터 기능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는데, 제주도 지하수의 천적인 골프장과 호텔 그리고 콘도 등의 각종 위락 시설이 바로 이 중산간지대에 집중적으로 위치하고 있다는데, 오늘의 제주 비극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시차 조정도 할 사이 없이 제주도로 직행해야 했다.

평소 제주도를 한국의 마지막 생태계 마지노선으로 선언하고, 제주도 보호에 목청을 높여 왔던 터라 제주도 개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집단이기주의다 데모만능이다 해서 말 많은 세상이지만 생존권 투쟁이라는 차원에서 이번의 제주도민 쉼기대회는 환경보호 운동의 효시가 될 것이다.

제주도 개발특별법제정반대 제2차 도민 쉼기 대회는 10월 22일 오후3시부터 제주시내 탑동(塔洞) 매립지 제2공원 주차장에서 제주시민, 학생 등 약 1천 5백여명의 군중이 운집한 가운데 열렸다.

이 대회에서 범도민회측이 적극적인 상경투쟁을 전개하겠다는 계획을 구체화함으로써, 특별법 국회상정이 임박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정부여당과 범도민회의 마찰은 전국적인 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날 쉼기대회에서는 제주개발은 도민의 의사에

따라 주민 주체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도민의 의견을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제정되는 특별법은 <재벌에의 특혜> <지역주민 소외> <환경파괴 등을 가속화>한다며 특별법 제정 반대투쟁을 결사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천명해, 향후 그 귀추가 심각해 보였다.

1부에 이어 오후 5시 15분 2부행사로 평화대행진에 나선 군중은 퇴근길 시민들이 합세하면서 2천여명으로 불어난 채 "50만도민 다 죽이는 특별악법 막아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중앙로~남문로를 거쳐 오후 7시 광양로타리에 도착, 3부행사를 가지고 성토대회 기구를 날려보내는 특별악법 및 민자당추방식 그리고 결사투쟁 선포식을 거행하는 등, 제주도에서는 드문 환경보호를 위한 집단 항거를 보였다.

개발은 아무리 용의 주도하게 실시해도,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악화시키게 마련이다.

더구나 주먹구구식이거나, 누구(재벌 등의 이익집단)를 보아주기 위한 개발은 나라마저 망침을 유의해야 한다.

이제, 그만 개발의 삼질을 돌아보아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생태계의 마지막 마지노선이며 환경의 바로미터인 제주도의 개발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을 경고한다.

그리고, 곧 국회에 상정될 <제주도 개발특별법 제정>은 마땅히 백지화 되어야 한다.

-1991년 10월 23일 제주도에서-

<筆者: 本會 顧問/UNEP 글로벌 500 委員>